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2면

1965년 한일협정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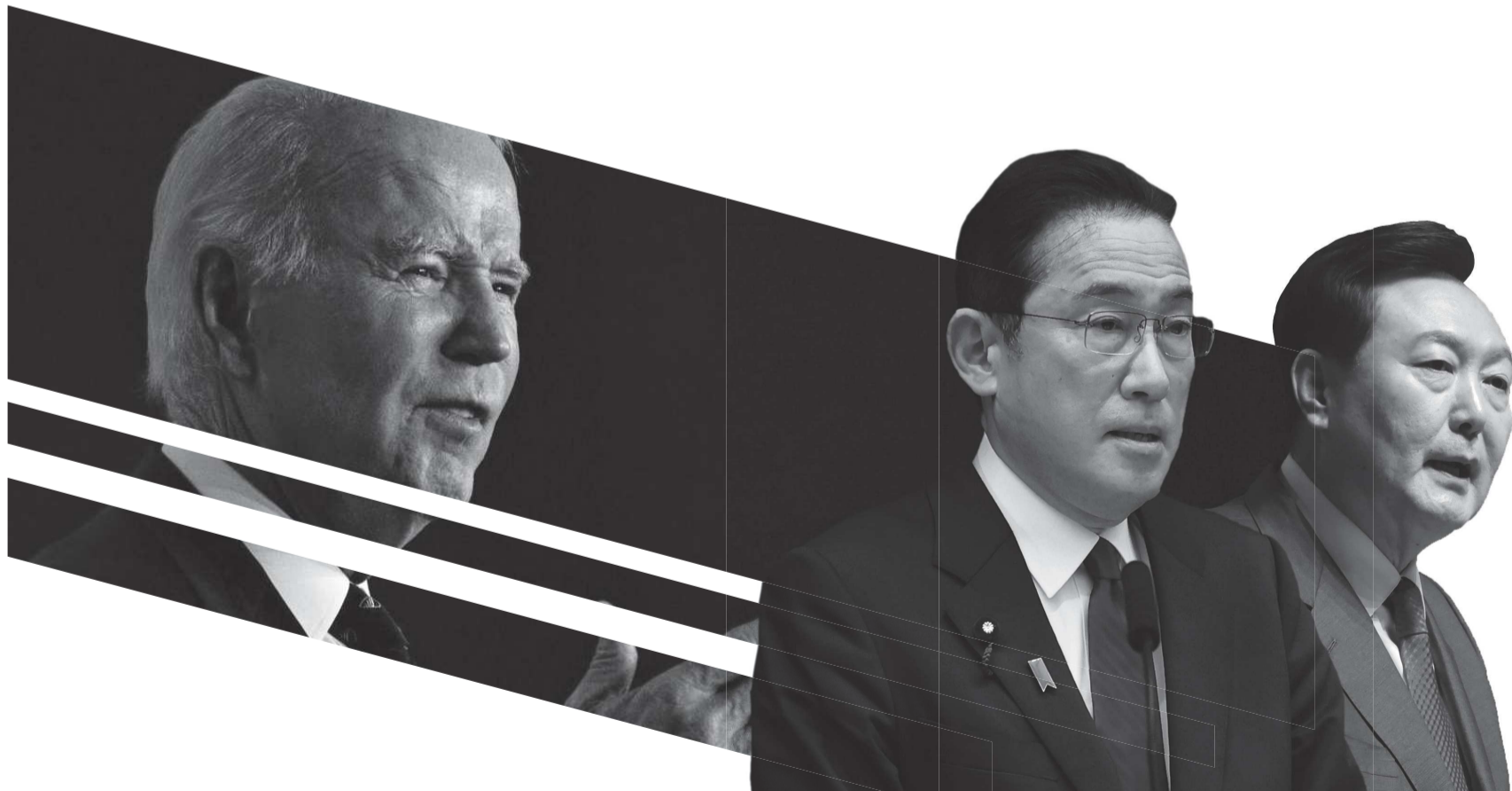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4~5면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6면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7면

노동시간 개악안  
8면

# 한일 정상회담은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드는 것



오직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만 발행하는

## 노동자 연대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이 윤석열 퇴진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정기 후원 신청

##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룬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윤석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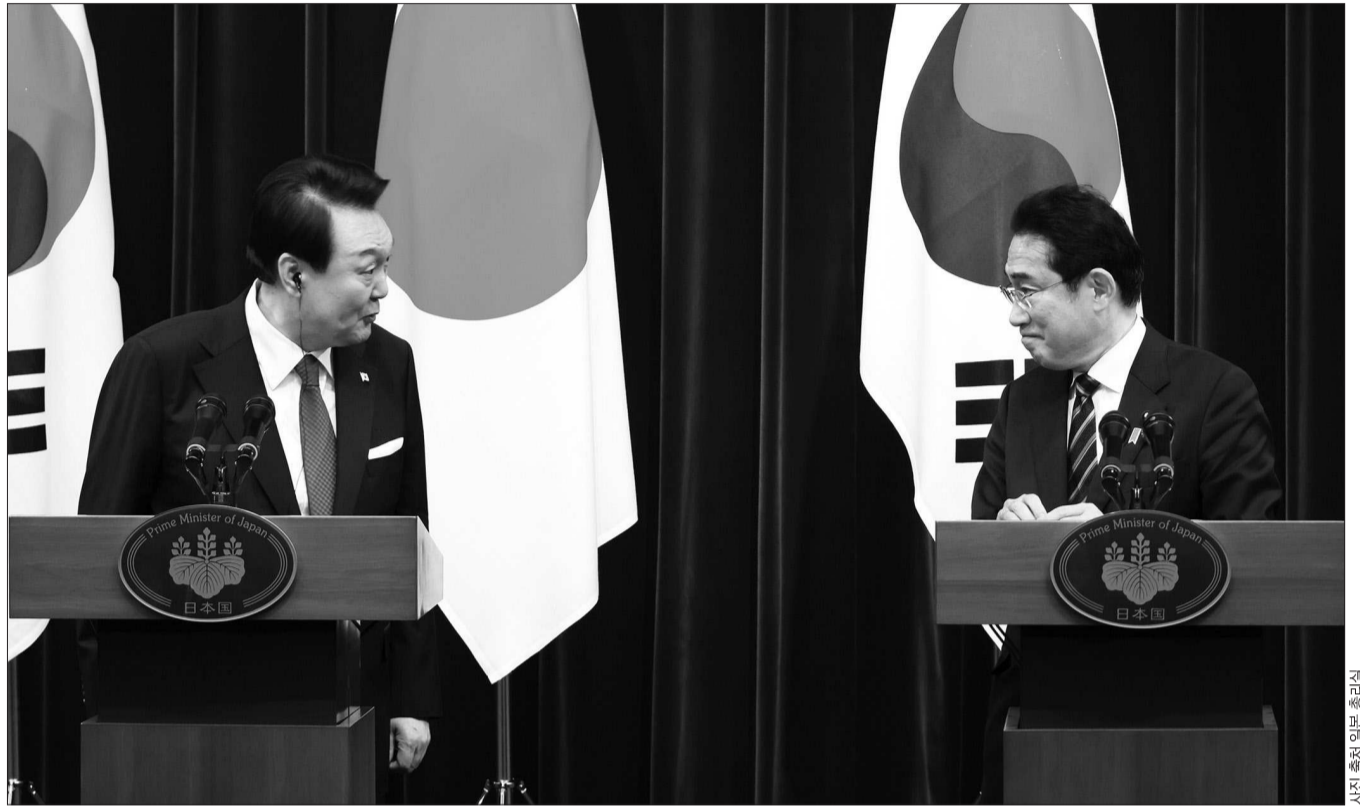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습니다.”(기시다)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기반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의 배상 책임(그나마도 피해자 1인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을 거부하고 면죄부를 내준 자들이 자유, 인권, 법치를 운운하니 역겹기 그지없다.

한편, 이번 회담의 결과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3종에 관한 대한민국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WTO 제소를 철회했다. 수출 우대국 조치,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의 원상 복구도 논의해 나아가기로 했다.

일본 방문에 동행한 5대 재벌 총수(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롯데 신동빈) 등 기업인들도 일본의 기업인 단체(계이단련)와 회담을 가지며 양국 교류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며 축배를 들었다.

윤석열이 서방 제국주의 진영에 힘을 실어 주면서 강대국 간 각축전에 한 플레이어로 뛰어들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과 손잡고 벌이려는 그 어떠한 일도 진정한 의미의 ‘안전 보장’이나 평화와 관계가 없다.



“압도적 전쟁 준비”를 하자는 윤석열과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시다의 위험한 만남 3월 16일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 군사 협력 강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중국을 견제·포위하려는 미국을 편들며 결속을 다지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최근 주미 대사 조태용은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에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이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솔직히 토로했다.

윤석열과 기시다가 말한 “보편적 가치,” “자유롭고 열린 질서”라는 말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즐겨 사용하는 위선적인 용어이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앞세워 왔다.

기시다는 이번 회담에서 “현재의 전략 환경,” 즉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는 시급하다”고 말하며, 일본의 의장국인 5월 히로시마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의는 G7 국가들이 더 견고한 대중국 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때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바이든은 이러한 흐름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그는 3월 29~30일 열린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중국 ‘권위주의’에 맞서자며 미국이 동맹국을 모아낸 회의)에서 윤석열에게 ‘반부패’에 관한 세션을 주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4월 말에는 윤석열을 12년 만에 국민 자격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

을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 중에는 최근 부쩍 심화한 북한 핵문제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 당일 오전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한일 정상회담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과 기시다는 북한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은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미사일을 핑계로 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 강화는 주지하듯이 북한 너머 중국까지 겨냥한다.

최근 일본이 보유하겠다고 공언한 ‘반격 능력’도 북한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윤석열은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이를 지지한다고 일본 언론들에 밝혔다.

### 전쟁 불안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단이 윤석열에게 이번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의 실체가 뭐냐고 물었다. 윤석열은 이렇게 답했다.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다.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력 강화, 강대국과의 동맹이 모든 국민에게 이익(“국익”)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전쟁을 결정하고 그런 도박이 성공하면 얻을 것이 있는 쪽은 국가와 기업의 지배자들이다. 반면, 전쟁에서 총알받이가 되고 가족을 잃는 등 희생양이 되는 것은 대부분 노동자 등 서민층이다.

윤석열이 서방 제국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 주면서 제국주의적 각축전에 한 플레이어로 뛰어들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과 손잡고 벌이는 그 어떠한 일도 진정한 의미의 ‘안전 보장’이나 평화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한반도 주변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 뿐이다.

이미 한일 양국의 지배자들은 저마다의 노골적인 호전적 정책(기시다의 군비 5년 내 2배 증액,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론 등)으로 자국민 다수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규탄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특히 윤석열의 서방 제국주의 지원 행보에 대한 반대와 연결되어야 한다.

# 1965년 한일협정

##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2012년, 2018년)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자신도 얼마 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모순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 1965년 한일협정이 있는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는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 개발 자금을 일본한테서 제공받는 대가로 강제동원 등 일제의 식민 지배 피해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해 줬다. 일본 국가의 배상은 물론 어떠한 사죄 문구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돈을 준 일본도, 돈을 받은 박정희 정부도 그 돈을 피해자들의 청구권 몫으로 여기지 않았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받은 돈에서 피해자 지원에 쓰인 돈은 무상 지원금 3억 달러 중 5.4퍼센트에 불과했다.

이 협정의 진정한 성격은 냉전 시기 동북아시아에서 반소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의 일환이었다. 당시 한일협정 체결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은 미국한테서 나왔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냉전 전략을 실행하는 데서 일본은 핵심 파트너였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은 총부리를 겨누는 사이였지만, 소련과의 냉전적 대립이 뚜렷해지자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핵심 파트너로 삼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천황제를 비롯한 구질서와 기존 권력자들의 권력을 유지시켰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대일강화조약)으로 미국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같은 해 미일안보조약 조약을 체결했다.



한일협정은 미국 제국주의의 동맹 구조 강화에 기여했다. 1965년 한일협정 조인식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저지른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집단안보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에게 동맹국들이자 대소련 전초기지인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1964년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한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부담이 가중되자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은 전후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던 일본이 한국을 지원해 안보 비용을 분담하고, 대신 한국이 일본의 파트너 구실을 해 주길 바란 것이다.

### 삼각 협력

미국의 이런 이해관계는 당시 일본과 한국 지배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다.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가 필요했던 일본 자본주의에도 한국과의 국교 수립은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대소련 전초기지인 한국의 대일 우호 정부의 안락과 경제 성장은 일본의 안보와도 연결된 문제였다.

한편, 자본축적을 위한 자금이 절실

했던 박정희에게 일본의 원조는 매우 긴급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게 경제 성장은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서도 중요했다.

이렇게 체결된 1965년 한일협정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한미일 협력 구조가 오늘날 다시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따금 갈등하기도 하지만, 갈등은 삼각 협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로 봉합돼 왔다.

이런 한미일 협력 관계 속에서 이득을 취해 온 한국 지배계급은 그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 애써 왔다. 반대로, 강제동원, 위안부 등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완전히 무시됐다. 이 문제에서 한미일 3국 지배자들은 공범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저 굴종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응한 게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윤석열의 제3자 변제 '해법'도 바로 이런 노선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이 노선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컨대 반일 민족주의를 정

치적 위기 탈출용으로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도 정작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강제집행은 중단시켰다.

### 노동자·민중 쥐어짜기

우파는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그리고 미국)과 긴밀해졌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제공한 자금과 기술 지원은 한국 자본주의가 자본축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포스코 등 철강 산업과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의 성장도 일본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다. 철도, 지하철, 통신, 송전시설, 댐 등 기간 시설을 짓는 데서도 일본의 자금이 많이 쓰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자본가 계급과 국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노동자들을 비롯해 한국 서민층은 미국·일본이 후원한 독재 정권하에서 쥐어짜이고 짓눌려 살아야 했다.

한일협정이 발판을 마련한 한미일 협력 구조는 일본 제국주의 부흥의 발판이 돼 지금 아시아 긴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강제동원 합의는 민족적 굴욕 문제가 아니라 미일 제국주의, 그리고 이에 협력하는 한국 지배계급의 문제이다.

사진: 연합뉴스/대한민국대법원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갑작스러운 파산은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SVB는 자금 조달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돈 지 불과 36시간 만에 예금 56조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했다. 이후 압호화페를 주로 거래한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하는 등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 미국 정부는 긴급하게 파산한 은행들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은행 주가가 떨어지며 세계적으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위기는 세계 9위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로 확산됐다. 크레디스위스의 자산 규모는 2008년 파산한 리먼브라더스의 두 배에 달한다. 파산을 막기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이 70조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과연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처럼 금융 위기의 방아쇠 구실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자국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전까지도 각국 정부들은 비슷한 말을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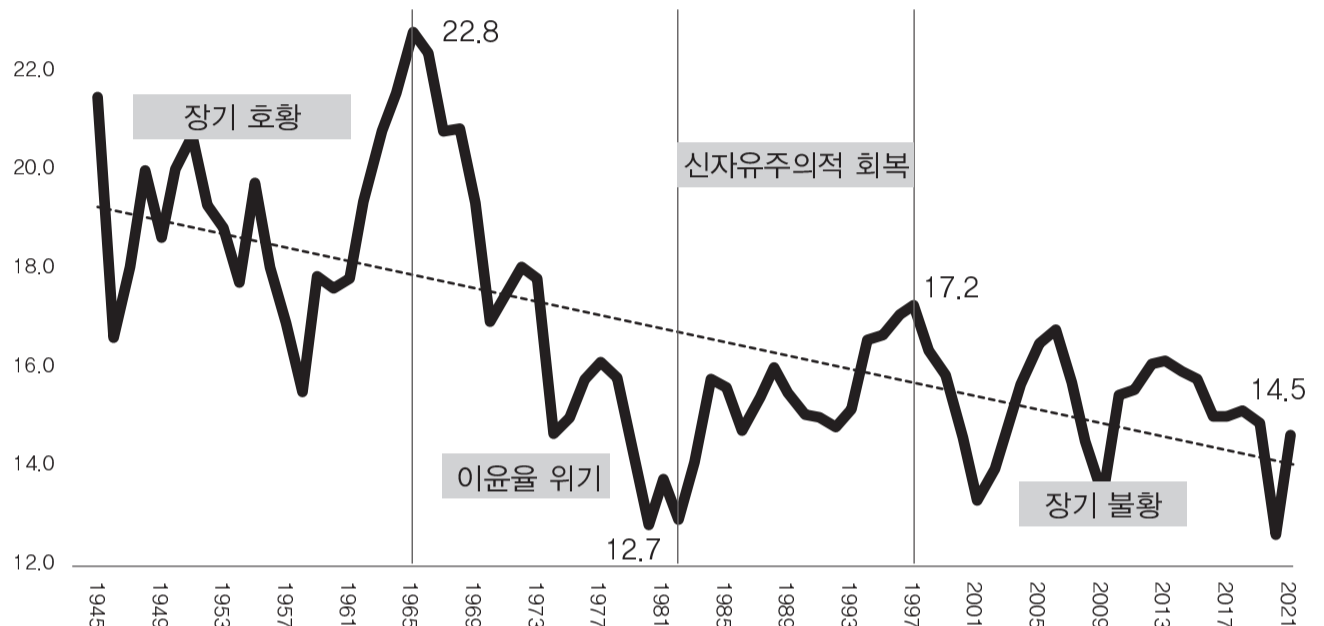
물론 SVB 파산은 리먼브라더스 파산과는 차이가 있다. 200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주택담보대출과 그에 기반을 둔 파생금융상품들이 부실해지며 금융 위기가 촉발됐다.

이와 달리 SVB 파산은 IT 벤처기업 거품이 꺼진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IT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크게 성장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뿐 아니라 각국의 저금리 정책 덕분에 투자금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IT 벤처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SVB도 지난 몇 년간 급성장했다. SVB의 자산 규모는 2020년 말 1155억 달러(약 150조 원)에서 2021년 말 2115억 달러(약 275조 원)로 거의 2배로 불어났다. SVB는 이렇게 늘어난 자금을 안전자산

미국 비금융부문 기업 이윤율(퍼센트)

출처: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대량 투자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경제가 침체하고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자 IT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이 기업들은 SVB에서 예금을 인출해 가기 시작했다. SVB는 예금 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팔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며 큰 손실을 봤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며 뱅크런이 벌어진 것이다.

구체적인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리먼브라더스와 SVB 파산은 근본에서 같은 원인 때문에 벌어졌다.

기업들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로 부풀어 있던 자산 가격이 꺼지자 취약한 부문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영국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가 마이클 로버츠의 분석을 보면, 미국의 비금융 기업 이윤율은 2008년 전에 견줘 더 떨어졌다. 2008년 위기를 낳은 낮은 수익성이라는 문제는 지난 15년간 오히려 더 심화된 것이다.(위 그래프)

각국 정부들은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려 했다. 이 돈 중 일부는 IT 벤처기업에 '과잉 투자' 됐고, 더 큰 돈은 주식·부동산 시장 등에 흘러들어 자산 거품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부채도 크게 치솟았다. 세계 총부채는 2008년 이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200퍼센트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GDP의 345퍼센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각국 정부들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에 나서자 기업들의 부실이 증대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꺼지며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관련 기업들이 파산한 데 이어 최근에는 IT 벤처기업 관련 은행이 위기를 맞고 있다. 크레디스위스의 위기는 이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기업주들을 위한 막대한 지원

미국 정부는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기업주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고액 예금도 전액 보증하고, 연준이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지원할 때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가격을 액면가대로 인정해 주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재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재원을 활용해 예금주들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2008년 구제금융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2008년에 기업주와 은행들을 살리려고 정부가 막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큰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SVB의 예금주 대부분은 IT 벤

처 기업주들이다. 바이든 정부가 신속하게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고 나선 것은 IT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SVB의 자산을 판매해서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지만, SVB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므로 결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위기에 처한 IT 기업들과 은행들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며 수익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 등을 막을 조처는 전혀 내놓지 않았다. 결국 2008년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살리는 데는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하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큰 고통이 전가되는 것이다.

2008년 위기 속에서도 은행가들과 기업주들은 큰 보너스를 챙긴 반면, 미국에서만 900만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고, 일자리 수천만 개가 사라졌다. 이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

지금도 SVB의 CEO 그레그 베커는 파산 직전에 주식 47억 원어치를 매각하며 돈을 챙겼다.

2008년과 같은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등 서민이 아니라 기업주와 은행가들이 지게 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후폭풍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바 있다.

금융권은 SVB 사태가 국내에 직접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추경호도 3월 14일에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SVB와 관련된 투자도 거의 없고 상태로 양호하다며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SVB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어 그 후폭풍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SVB 파산 직후 유럽의 주요 은행인 크레디스위스가 파산 위협에 처한 것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 줬다.

미국 정부가 급히 SVB 예금 전액 보장 대책을 내놓은 것이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지방은행들의 추가 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SVB는 벤처기업들에서 예금을 끌어모으고 이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큰 손해를 봤다. 고위험 벤처기업과 미국 국채 투자에 기반을 둔 SVB의 사례는 국내 금융기업들의 상황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가

격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

## 제2금융권

미국 SVB 파산의 충격은 한국에서 제2금융권(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드러난 제2금융권의 부실 위험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국내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기업에 대거 대출했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3월 9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PF 대출잔액은 은행권이 30조 8000억 원, 비은행권이 85조 8000억 원이다. 증권사(27조 4000억 원)와 보험사(44조 6000억 원)처럼 은행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제2금융권의 PF 대출이 상당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위기가 계속된 지난해에도 증가해 저축은행 상위 10곳의 PF 대출이 4조 5357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제2금융권 PF 대출의 위험도는 은행보다 더 크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고위험 PF 대출 비중은 은행이 7.9퍼센트인데 반해, 보험사 17.4퍼센트, 증권사 24.2퍼센트, 저축은행 29.4퍼센트로 추산됐다.

경기 침체 심화는 제2금융권에서 회수되는 자금도 늘리고 있다.



치솟는 금리와 경기 침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금리가 급등하며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자, 저축성보험 해지가 늘어나며 생명보험사들의 자금 상황을 악화시켰다.

생보험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보험 해약환급금은 38조 5299억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4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보험 계약액은 23조 2284억 원에 그쳐, 보험사들에서 십수조 원이 빠져나갔다.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도 경기 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금리도 치솟아 이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올해에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1월 경상수지·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의 경기 침체도 타격을 주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을 높일 다른 방법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 개악을 추진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 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경기 침체와 기업 부채 위기가 심화될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고물가·고금리로 벌어진 생계비 위기에 맞서 실질임금을 방어하기 위한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자고?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은 3월 13일자 사설에서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1.25퍼센트포인트”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환율이 폭등”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위기

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말이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금융·외환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단지 환율을 방어하려고 금리를 올린 것만은 아니다. 한국은행도 다른 중앙은행들처럼 ‘임금-물가 악순환’을 우려하며, 경기를 침체시켜서라도 실업률을 높여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을 지키려 투쟁하는 것

을 막으려고 해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은 고금리·고물가로 이미 심각한 생계비 위기를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금리를 올리자고 요구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일인 것도 아니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금리 인하로 외화 유출이 벌어지면 정부가 나서 자본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물론 기업과 부유층은 이런 자본 통제에 반발하며 여러 방안들(수출대금의 해외 보유, 대량 해고와 기업 폐쇄 등)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자본 통제에 나서도록 만들고 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을 제압하려면 심중팔구 더 큰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이 투쟁을 근본적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의 일부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대안이다.

#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고 하는 말이다.

북한도 전략순항미사일 등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오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일본 앞바다로 발사했다.

이처럼 미·중 갈등 격화를 배경으로 연합훈련과 미사일 발사가 교차하며 한반도에 긴장이 쌓여 가고 있다.

## 체스판

지금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강대국은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저마다 적극적인 수를 주고받는 양상이다. 한반도는 그 체스판의 일부다.

3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중국의 중재로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주름잡아 온 중동에서 주요 행위자로 올라섰음을 과시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바이든 행정부에 경종을 울린 일"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시진핑은 이르면 다음 주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과 전략적 협력 증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푸틴과 젤렌스키 간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관여하려 한다.

미국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한일 관계 진전은 미국이 최근에 거둔 그들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다. 바이든 정부는 전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꼽아 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아시아 담당 부소장인 빅터 차는 강제동원 한일 합의가 한미일 3자 간의 제 추진에 속도를 낼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사 문제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제도화, 한미연합사와



윤석열 정부의 서방 제국주의 편들기는 한국이 냉전의 최전선이 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일본 방위성 간 연락장교 파견, 한미일 '확장억제'(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체계 등 모든 전력을 동원해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개념) 공동 협의체, 대만해협 유사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의 제안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3일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AUKUS)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최대 5척을 팔기로 하는 등 군사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할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 윤석열은 거기에 주된 행위자로 포함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 전구급

올봄 한미연합훈련은 미·중의 이런 각축전이 한반도라는 지역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실기동 훈련을 '전구급'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공세적인 의미가 있다. "전구급이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휘소 훈련은 물론이고 실기동 훈련도 세계 최대 규모 훈련이 부활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정육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달 말에는 미군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한국에 와서 한국군과 훈련을 벌인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도 참가하는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까지 실시한다. 한미 군사훈련이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이어지며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훈련도 1만 3000여 명을 동원해 대규모로 진행한다. 한국군은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훈련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쌍룡훈련에는 영국 코만도 부대도 참가한다. 오커스의 일원인 영국의 한미연합훈련 참가는 영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군사적 역할을 늘려온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당연히,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월 12일 동해에서 북한은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까지 기습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이다. 14일 북한은 황해남도 장연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곳은 남한 백령도에서 지척이고 서울과도 멀지 않은 곳이다.

16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후원 속에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주로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맞대응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얼마 전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시진핑의 국가주석 3연임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내어 북한과 중국의 관계 증진을 약속했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한미일의 압박에 대처하는 것이다.

## F-35A

《2022 국방백서》를 보면, 지난해 한미 군 당국들은 국내외에서 연합훈련을 총 256회나 벌였다. 365일 중 훈련을 벌이지 않은 날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연합훈련이 벌써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이에 더해 13일 윤석열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 F-35A 20여 대를 추가 도입하고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서 구입하는 동시에,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하며, 군비 증강에 매진하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 불안정화에 일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우파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이런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강할 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북한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국방비에 쓰며, 3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도 주둔해 있다. 이것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는데, 여기서 군국주의와 친서방 외교를 더 강화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대결 양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여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지배계급 자체의 이해관계를 나름대로 대변하며, 갈수록 분열해 가는 국제 질서 안에서 서방 제국주의와의 협력을 더 늘려서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인해 한국이 냉전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정부의 ‘강제동원 제3차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다음 날 <조선일보> 등도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한미일 군사 동맹(협력) 해체,” “주한미군 철수 투쟁”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항의 과정에서 사용된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졌을 때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보도했다.

검찰은 15일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관여했다는 활동가들을 구속 기소하며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공안 당국은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에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 위기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이라며 문제 삼는 운동의 요구와 구호들은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킨 핵심 쟁점들과 관계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린 구호 “퇴진이 추모다”

최근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는 대중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청년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무책임한 행보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사내하청 점거투쟁은 생계비 위기에 대한 불만을 대표해 윤석열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줬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수천에서 수만 명 사이 규모를 유지하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은 일각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번 북한 지령문 보도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반제국주의 평화운동, 반정부 운동, 노동운동을 분열·위축시키려는 것임을 보여 준다.

만일 이런 운동들이 서로 고무하고 연결돼 반정부 정서가 전면화되면 윤

석열 퇴진 요구가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윤석열은 이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퇴진 운동에 동참해 오지 않았는데도,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에 의해 나온 것처럼 당국이 몰아가는 것이다.

### 대중의 자주성

국정원·경찰과 우파 언론의 북한 지령 운운은 윤석열 퇴진 운동, 반제국주의 평화운동, 생계비 방어 투쟁 노동자들을 소수의 음모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꼭두각시 취급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요구와 선동이 지지를 얻고 광범한 운동에서 채택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잘 표현하고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질 때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가 지지를 얻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참사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뻔뻔하게 책임 회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일부 친북 활동가들이 이런 구호들을 운동 내에서 관철시키려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의 채택 여부는 국내 저항의 맥락 속에서 결정되므로 북한 개입 여부는 아예 질문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아직 혐의에 불과한 것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

국정원은 이른바 ‘제주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들을 구치소로부터 강제로 인치해 신문했다.

### 이간

운동 내에서조차 친북 활동가를 국가 탄압으로부터 방어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관련 기사: 본지 2월 18일 자 호외 ‘북한 국가에 비판적 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 탄압을 이용해 해당 운동을 고립시키고, 서로 연대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설사 운동 내 누군가가 북한 당국 측 인사와 회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공안 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간첩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려 ‘북한 위협’을 과장하고 억압적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용하던 전통적 수법이다.

미중 갈등 첨예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심각하다.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서방(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편에 서는 것이 한국 지배계급에 이익이라고 보고 견줄음을 옮기고 있다.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노동조건 공격도 강화하려 한다.

이는 큰 반발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북한과의 연계·위협성을 부풀려 친제국주의 노선을 정당화하고, 보안법을 이용한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이런 책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폐해들에 맞서는 운동들을 더욱 키우고 서로 연결시켜 지배계급의 의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 ▶ 8면에서 이어짐

구하는 청년 세대에 안성맞춤이라고 내세웠다. 조직 노동운동의 기득권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막상 노동시간 개악안이 발표(입법예고)되자 MZ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장기휴가(바깥 쉬기)는 어불성설”이라며 개악 추진에 ‘청년 팔이’ 말라고 일침을 놓은 것이다.

노동계급 내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를 이간질하는 알팍한 책략이 이번에 먹이지 않은 것이다.

청년들이라고 일을 더 하고 임금이 주

는 것을 좋아할 리 만무하다. 지난 몇 년 사이 취업했다가 금방 퇴사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데에는 낮은 임금과 함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저녁이 있는 안정적인 삶은 청년 노동자들의 절실한 바람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규제는 청년들이 취미·여가를 누리고 정치활동에 나서는 데서도 필요한 조처다.

### 민주당에 기대야 하나?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회에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

명 대표는 “주 69시간제 결코 허용 않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노동시간을 규제하되 유연성을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늘리고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임금(수당)을 깎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와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고 혈안이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력은 이미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도 모두가 먹고 살

기에 충분할 만큼 발전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된다. 그래서 경제 위기 때 한쪽에선 대규모 실업이 생기는데, 다른 쪽에선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모순이 벌어진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계급 간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온 이유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약간 물러선 듯 하지만, 노동개악 시도는 끝나지 않았다. 이를 저지하려면 노동계급 대중의 만만찮은 투쟁이 필요하다.



#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꿈수를 부리다

윤석열 정부가 특정 시기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쳐 일하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열흘도 안 돼 한발 물러섰다.

해당 법안이 대중적 불만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은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가이드라인(주 60시간 상한 캡)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쉬자며 개악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연초부터 박차를 가하더니 서둘러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를 편들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들에 대한 서민층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미일 동맹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불만까지 강하게 제기되자, 정부는 일단 노동시간 문제에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 최대 주당 80시간

윤석열의 노동시간 개악안은 주당 52시간으로 기준 삼아서 일감이 많을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윤석열의 노동시간 유연화 개악은 일을 더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려는 것이다

때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주말 휴일 근무까지 하면 주당 80.5시간도 가능해진다. 이를 연속 꼬박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렇게 몰아쳐 일하는 대신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몰아쳐 장시간 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쪼먹고 위험에 빠뜨린다. 윤석열이 한 발 물러서며 말한 주 60시간 노동도 만성으로 기준이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빌딩에서 나흘간 62시간 연속 근무를 하던 40대 경비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압축적 장시간 노동은 생활 리듬을

깨뜨리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대신 몰아쳐 쉴 수 있다지만, 그 시간 대부분은 극도로 축난 몸을 회복하는 데에 쓰이게 될 것이다.

정부의 개악안대로라면 임금도 더 깎이게 된다. 유연근무제는 공짜 초과근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무 수당을 매달 30만 원씩 받는 노동자에게 개악안을 적용하면 연 평균 임금이 108만 원 삭감된다.(민주노총 법률원 조사)

정부가 당근으로 내세우는 장기휴가도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몇몇 설문 결과를 보면 전체 노동자의 30퍼센트가 연차 사용을 못하고 있다. 사

회 초년생일수록 더 그렇다. 사용자들의 눈치 때문이다.

요컨대, 압축적 장시간 유연 노동은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시간의 선택권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통하지 않은 "청년 팔이"

역대 보수 정부들은 전통적으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을, 18대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주요 지역지부들이) 박근혜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문재인, 이재명 후보를 연달아 공식 지지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다.

노동 개악에 사회적 대화의 이름으로 한국노총의 지지를 이용할 수도 있었던 전임 정부들과 달리 윤석열은 그러질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노동운동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추켜세우며 개악 추진의 파트너로 삼고자 했다.(물론 규모가 작아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화 개악이 워라벨(일과 생활의 양립)을 추

▶ 7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총 4900여 개 콘텐츠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일시 3월 22일(수) 오후 8시

발제 김승주 <노동자연대> 기자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322-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